

2022. 12

이슈포커스 2022-04호

수산 이슈포커스

■ 수산부문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시 절감 효과 | 김우경 연구위원

■ 2023년 경제 및 금융 현안 | 강인순 책임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수산현안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슈포커스를 발간 ·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슈포커스

Topic

■ 수산부문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시 절감 효과	3
김 우 경 연구위원	
■ 2023년 경제 및 금융 현안	27
강 인 순 책임연구원	



수산부문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시 절감 효과

김 우 경 연구위원
(kww777@suhyup.co.kr)

목 차

요 약	4
I. 서 론	7
II. 수산분야 에너지 및 농사용전기 사용 실태	8
III. 농사용전력 확대 적용 법률개정 추진 현황	14
IV.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확대 적용 시 절감 효과	21
부록 : 전기요금 인상 및 이에 따른 문제점	23

요 약

■ 개 요

-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수산업의 경영환경은 더 어려워짐
- 일부 농사용전력 미적용 수산시설에게는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임
- 농사용전력 확대 적용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
- 최종 수산부문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시 절감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 수산분야 전기사용 현황

- 전체 산업 부문 중 수산업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낮으나 GDP 대비 에너지 사용은 높은 편임
 - 에너지 소비 비중 : 0.7%
 - 수산분야 GDP 비중 0.4%(19년 기준)

■ 농사용전력 미적용 수산분야 시설

- 수산분야 주요 시설 중 아직 농사용전력 미적용 시설이 많아 확대 절실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미적용 시설】

시설명	농사용 전력		비 고
	현재 적용	확대 필요	
산지위판장	미적용	적용	저온위판장 운영비용 과다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수협, 어촌계 단독소유만 적용	어업인 개인 운영 포함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은 포괄 적용 중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수협, 어촌계 단독소유만 적용	수협, 어촌계 단독 운영(임차)포함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임에도 소유 여부와 규모에 따라 제한 적용
	계약전력 1,000Kw 미만 적용 (FPC는 1,000Kw 이상도 적용)	계약전력 1,000Kw 이상 포함	
활어위판장 생존유지시설	미적용	해수 양배수펌프 등 필수시설	양곡 생산 양배수 펌프는 적용 중
양식장폐사어 처리시설	미적용	환경개선, 자원재활용 등 위한 필수시설	축산물 가축분뇨 처리장은 적용 중

■ 최근 법률 개정 추진 경과

- 개정법률안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전기사업법」개정 추진
- 추진 경과 : 2022.12월 현재, 소관위심사 중

■ 농사용전력 제외 수산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시 절감효과

- 농사용전력요금 적용 시 발생가능한 절감 금액은 현재 납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36.5% 수준임

I 서론

■ 농사용 전력 적용은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임

- 농사용 전기는 농어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기를 산업용 등 타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음
- 어촌은 현재 일부 제한된 수산시설에서 농사용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산물 생산량 감소, 고령화, 유가 인상, 기후변화 등으로 경영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수산업의 경영환경은 더 어려워짐

- 최근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일괄적으로 정액요금을 인상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옴
- 한전의 전기요금 일괄 인상으로 수산업의 경영환경이 더 악화되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경영체가 확대되고 있음

■ 일부 농사용전력 미적용 수산시설에게는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임

- 기존 농사용전기 사용 혜택을 받고 있는 시설도 이번 전기요금 폭등으로 경영수지가 안좋아짐
- 그런데 수산시설 중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위판장, 제빙냉동시설(1,000kw 이상), 활어위판장 생존유지시설, 양식장폐사어처리시설 등의 시설은 더 큰 피해를 받게 됨

■ 농사용전력 확대 적용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

- 수산시설의 농사용 전력 확대를 통해 농업분야 대비 제한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수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직 농사용전력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Ⅱ 수산업 에너지 및 농사용전기 사용 실태

1. 수산업 에너지 소비 실태

▶ 전체 산업 부문 중 수산업의 소비 비중은 낮으나 GDP 대비 에너지 사용은 높은 편임

○ 수산업(어업) 부문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

【수산업(어업) 에너지 소비 추이】

(단위 : 천TOE, %)

구 분		에너지소비량					
		1992	2001	2010	2013	2016	2019
산업 부문 소비량	어업	498 (1.0)	1,750 (2.2)	1,025 (1.0)	988 (0.8)	987 (0.8)	981 (0.7)
	농림업	1,770 (3.6)	2,737 (3.4)	2,409 (2.3)	2,497 (2.1)	2,333 (1.8)	2,442 (1.8)
	광업	190 (0.4)	141 (0.2)	145 (0.1)	130 (0.1)	154 (0.1)	132 (0.1)
	제조업	45,947 (93.8)	74,875 (93.0)	97,989 (95.1)	113,820 (95.7)	124,600 (95.8)	130,662 (95.8)
	건설업	591 (1.2)	1,018 (1.3)	1,449 (1.4)	1,556 (1.3)	1,935 (1.0)	2,131 (1.6)
	합계	48,997 (100.0)	80,522 (100.0)	103,017 (100.0)	118,991 (100.0)	130,010 (100.0)	136,348 (100.0)
수요부문 전체 소비량		89,313	143,194	183,912	200,347	215,419	226,479

자료 : 정책토론회 자료(22.11.30), 원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0에너지총조사(2019년 기준)

○ 하지만 '19년 기준 GDP 대비 수산업 비중이 0.4% 인 것을 감안하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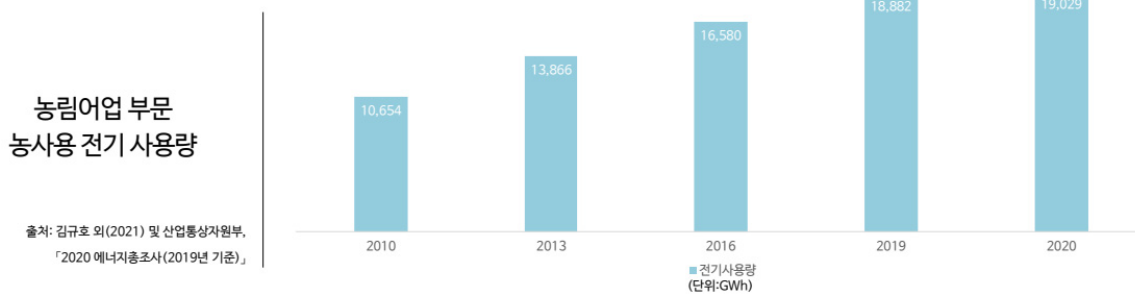
▶ 전체 산업 대비 비중은 낮지만 최근 수산업 어촌의 전기사용량은 증가 추세

○ 기후변화와 수산업 구조변화로 인한 냉난방 수요 증가, 기계화 및 현대화의 진전, 수산양식시설의 규모화·전문화 등으로 어가의 에너지 사용이 증가

○ 이에 따라 어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전기사용량 10,654GWh에서 2020년 19,029GWh로 78.6% 증가

【수산업·어촌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



자료 : 정책토론회 자료('22.11.30)

2. 수산분야 농사용전기 사용 현황

1) 수산분야 전력사용 비중

■ 농사용(을)고압A : 전기사용 비중 78% 수준

- 농사용(을)고압A 전기의 경우 '21년(1~12월) 비율은 77.8%, '22년(1~9월) 비율은 78.2% 수준임

■ 농사용(을)저압 : 전기사용 비중 21% 수준

- 농사용(을)저압 전기의 경우 '21년(1~12월) 비율은 21.3%, '22년(1~9월) 비율은 20.8% 수준임

* 한전에서 농사용전력을 적용하도록 분류한 수산시설 기준으로 현재 농사용(을) 고압A와 농사용(을)저압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수산분야 산업용도별 전력사용 비율】

(단위: MWh, %)

구분	'21년(1~12월)		'22년(1~9월)		비고(기준)
	사용량	비율	사용량	비율	
합계	2,969,668	100.00	2,235,410	100.00	-
농사용(을)고압A	2,309,748	77.78	1,748,132	78.20	전압 3,300V이상 66,000V 이하 해 내 중 서
농사용(을)저압	633,333	21.33	465,602	20.83	전압 110·220·380V 해 내 내 연 원 중 서
산업용(갑)저압	9,188	0.31	7,060	0.32	전압 110·220·380V 해 내 내 연 원 중 서
일반용(갑)저압	7,930	0.27	6,807	0.30	전압 110·220·380V 해 내 내 연 원 중 서
산업용(을)고압A	5,375	0.18	4,956	0.22	전압 3,300V이상 66,000V 이하 해 내 내 연 원 서
산업용(갑)II고압A	4,035	0.14	2,821	0.13	전압 3,300V이상 66,000V 이하 해 연 중 서

※ 표준산업분류

- 양식어업 분류 [해 : 해수면 양식어업, 내 : 내수면 양식어업, 중 :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 어로어업 분류 [해 : 내수면어업, 연 : 연근해 어업, 원 : 원양어업]
- 기타 분류 [서 : 어업 관련 서비스업]

자료 : 정책토론회 자료('22.11.30) * 원자료 : 한전 디지털 변환처

2) 농사용전기 사용 비중

▶ 판매 전력량 : 농사용 3.9% 비중, 타 산업 대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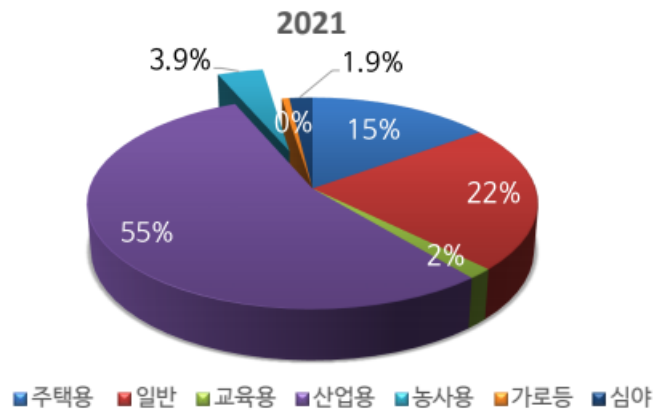
- 농사용 전력은 한국전력 전체 전기판매량의 3.9% 수준
- 주택용 15.0%, 산업용 54.6% 등 타 산업 대비 매우 낮은 비중 차지

【전기 판매 전력량 추이】

(단위 : MWh)

구분	합계	주택용	일반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2021	533,430,811 (100%)	79,914,811 (15.0%)	119,550,386 (22.4%)	8,422,605 (1.6%)	291,333,422 (54.6%)	20,603,212 (3.9%)	3,444,429 (0.6%)	10,161,945 (1.9%)

출처 : 한국전력공사(2022), 「한국전력통계」제91호



산업 용도별 소비 전력량 : 농림어업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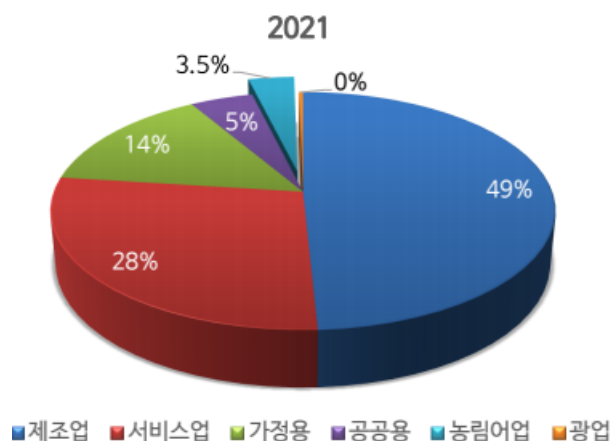
- 농림어업은 산업 용도별 3.5%의 비중을 차지
- 타 산업의 전기 소비 비중은 제조업 49.2%, 서비스업 27.8% 등임
- * 산업 용도별 소비(판매)전력량이란 계약종별에 관계없이 용도별 및 산업 분류에 따라 판매한 전력량임

【산업 용도별 소비 전력량】

(단위 : %)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2021	49.2	27.8	14.5	4.7	3.5	0.3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림어업의 경우 농업, 임업, 어업을 포괄하는 개념임
출처 : 한국전력공사(2022), 「한국전력통계」제91호



수산분야의 농사용 전기사용 비율이 낮아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크지 않음

3.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적용 범위

■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적용 범위

- 수산물양식업,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수협·어촌계 단독소유, 운영), 농수산물 건조시설
-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수협·어촌계 단독소유, 운영 / 계약전력 1000kw미만 해당)
- 굴껍질 처리장(굴생산자 또는 수산물 생산자 단체 운영)
-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수산물 생산자 단체 직접 운영)

■ 농업분야 농사용전력 적용 범위

-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농사용전력(갑) 적용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 축산, 양잠업, 저온보관시설 및 해충구제·유인용 전등
- 농산물 생산자의 농산물 건조시설 (조합대행 및 공동건조 포함)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 가축분뇨(공동)처리장(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

■ 농업분야와 비교 시 수산분야의 농사용전력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 한전에서 분류하고 있는 농사용전력 적용 수산시설에는 제외된 시설들이 많음
 - 산지위판장, 수산물저온보관시설,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일부), 활어위판장 생존 유지시설, 양식장 폐사어처리시설 등이 있음
- 농업분야 대비 동일하거나 유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임
- 특히 산지위판장은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되기 전 단계에 적용되는 시설로 어업인 개인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범주로 포함시켜 지원할 필요 있음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미적용 시설】

시설명	농사용 전력		비 고
	현재 적용	확대 필요	
산지위판장	미적용	적용	저온위판장 운영비용 과다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수협, 어촌계 단독소유만 적용	어업인 개인 운영 포함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은 포괄 적용 중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수협, 어촌계 단독소유만 적용	수협, 어촌계 단독 운영(임차)포함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임에도 소유 여부와 규모에 따라 제한 적용
	계약전력 1,000Kw 미만 적용 (FPC는 1,000Kw 이상도 적용)	계약전력 1,000Kw 이상 포함	
활어위판장 생존유지시설	미적용	해수 양배수펌프등 필수시설	농업인 양곡생산 양배수 펌프는 적용 중
양식장폐사어 처리시설	미적용	환경개선, 자원재활용 등 위한 필수시설	축산물 가축분뇨 처리장은 적용 중

▶ 이러한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미적용 시설에 대한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가 절실함

Ⅲ 농사용전력 확대 적용 법률개정 추진 현황

1. 최근 법률 개정 추진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관련 내용

- 의안번호 : 8128
- 대표발의 의원 : 하영제 의원(2021.2.16.)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수산물의 유통은 산지위판장과 수산물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자분산물류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유통과정의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이 가장 중요함
 - 또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의 핵심인 저온보관 및 저온가공시설과 냉동 및 냉장을 비롯한 저온유통시설의 운용비용은 전기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위판장과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 소비자분산물류센터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고,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보전 관련 시설에 대하여도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신설).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7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제55조의2(수산물 유통 기반시설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한 수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판장등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전기요금
 2. 수산물의 냉동·냉장·제빙·저빙 및 저온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의 전기요금
 3. 활어의 생존유지와 폐수처리·해수정수·해수펌프·폐각 및 폐사어 처리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과 관련한 시설의 전기요금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전기요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대상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에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의2(수산물 유통 기반시설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한 수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판장등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전기요금 2. 수산물의 냉동·냉장·제빙·저빙 및 저온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의 전기요금 3. 활어의 생존유지와 폐수처리·해수정수·해수펌프·폐각 및 폐사어 처리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과 관련한 시설의 전기요금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전기요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대상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에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관련 내용

- 의안번호 : 8129
- 대표발의 의원 : 하영제 의원(2021.2.16.)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에는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종별 전기요금 전기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 계약종별 전기요금이 법령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약관에 근거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을 도모하고 농어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농수산물의 생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판매, 제빙, 냉동, 냉장,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 ▶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제16조의5(농어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감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생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판매, 제빙, 냉동, 냉장,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
 2. 그 밖에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경우 전기요금 감면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최근 법률 개정 추진 경과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관련 내용

- 의안번호 : 8128
- 대표발의 의원 : 하영제 의원(2021.2.16.)
- 추진 경과 : 2022.12월 현재, 소관위심사 중

▶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관련 내용

- 의안번호 : 8129
- 대표발의 의원 : 하영제 의원(2021.2.16.)
- 추진 경과 : 2022.12월 현재, 소관위심사 중

3. 법률개정 관련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건의 내용

* 본 내용은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를 위해 국회에 건의한 내용임

1) 수산물 산지위판장 농사용전력 적용

▶ 현 황

-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한전「전기기본공급약관」의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위판장 전기사용 현황 : 31억 5천만원('20년 기준)
 - 전기요금 납부 위판장 : 약 153개소(65개조합)

▶ 문제점 및 농사용전력 적용 사유

- 정부는 산지위판장에 저온유통체계 적용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
- 그러나 저온유지를 위한 전기료 부담 및 이에 따른 유통원가 상승 등 회원조합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 ※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정부예산 수립(2020년) : 1,485백만원
 - ※ 산지위판장 리모델링 225백만원(설계비 5%), 자동선별기 600백만원, 저온차량 660백만원

- 식품안전성을 위해 저온유통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공동이용시설 이자 필수 시설인 산지위판장에 반드시 농사용전력 적용이 필요함
- 저온위판장의 운영 확대와 어업인의 전기료 부담 경감을 통해 최초 농사용 전력 적용의 목적인 농어업인의 보호를 위해서 농사용전력 적용이 반드시 필요

2) 어업인 운영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에 농사용전력 적용

현 황

- 저온보관시설은 대부분 어업인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행 기준은 수협, 어촌계 단독 소유, 운영시에만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음
- 판매(영업)용이 아닌 생산단계 또는 위판전 일시 보관(소규모 임시보관)
 - 건조용 멸치 일시보관, 조업용 미끼 보관, 출하전 일시보관 등

문제점 및 농사용전력 적용 사유

- 농업분야 적용 대비 형평성의 차이 발생
 - 농작물(농민)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전력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어업인 차별 발생
- 어업인 운영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에도 농사용 전력 적용 필요
 - 저온보관시설은 유통단계 前 생산을 위한 시설로 대부분 어업인 개인 운영중
 - 어업인이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농사용전력 적용 필요

3)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농사용 전력 적용시 계약전력 확대

현 황

-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중 계약전력 1,000kW미만에 대하여만 농사용전력이 적용되고 있음
 - 계약전력 1,000kW이상 시설은 농사용 전력 적용대상에서 제외

■ 문제점 및 농사용전력 적용 사유

-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물 생산 필수시설임에도 그 역할이 더 큰 계약전력 1,000kW이상 시설에 대하여 농사용전력 적용 제외는 불합리
- 농업 및 축산분야의 농사용전력 적용제한은 없으며, 수산업분야 단체에 대해 사용전력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 수산물은 농산물에 비하여 선도유지가 어렵고 생산부터 최종 판매시까지 저온, 냉동보관 시스템이 필요한 품목으로 반드시 농사용전력 적용 필요

4) 활어위판장 생존유지시설 및 양식장 폐사어처리시설에 농사용 전력 적용

■ 현 황

- 현재 수산물 생존유지시설은 농사용전력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전국 수협위판장 또는 개인 소유 생존유지시설은 위판되기 전 수산물의 생존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생존유지시설은 위판 이후 유통되기 전 수산물 시설로서 반드시 농사용전력 적용이 필요한 시설임
- 양식장 폐사어 처리 수협 회원조합 시설('20년 말 기준)은 2곳
 - 제주어류양식수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20년 말 기준)】

(단위 : 톤, 백만원)

조 합	시 설	소 유	처리량	사용전력	전기사용료
제주어류양식수협	폐사어 처리	수협	9,000	산업용	75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8,800		61

■ 문제점 및 농사용전력 적용 사유

- 해수 양·배수펌프, 산소공급 및 온도조절장치 등은 활어의 생존유지를 위한 위판장 필수시설임
- 폐사어 방치시 부패, 수질오염, 전염병 등 양식어류 생산차질 발생
- 양식장 폐사어처리 시설은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변해역의 환경개선, 자원 재활용, 환경보호 등 공익적 기여 외에도 양식어류의 안전성 유지와 생산성 향상 등 양식어업의 지속적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
- 농업분야 대비 형평성 차이 발생
 - 해수 양·배수펌프와 유사한 양곡생산을 위한 양·배수펌프 조작시설 및 폐사어 처리시설과 유사한 축산물 가축분뇨처리장은 농사용전력 적용

Ⅳ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확대 적용 시 절감 효과

1. 수산시설 전기사용 현황

■ 수산시설 전기사용 현황('20년 기준, 수협 회원조합 설문조사 결과)

- '21년 회원조합의 주요 수산시설에 대한 전기사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사용 수준은 85억 1,800만원임
- 주요 시설은 위판장(생존유지 시설 포함), 저온보관 시설, 제빙냉동 시설, 양식장 폐사어처리시설 등이 포함

【수산분야 전기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현황	계약종별	사용량(천kWh)	전기요금
계	-	-	96,783	8,518
위판장 (생존유지 시설포함)	167개소 (66개조합)	일반용 산업용	25,256	3,360
저온보관 시설	172개소	농사용 일반용 산업용	14,172	1,129
제빙냉동 시설	71개소 (55개조합)	농사용 일반용 산업용	56,478	3,893
양식장폐사어 처리시설	2개소 (2개조합)	산업용	877	136

* 회원조합 수집 자료, 기준('21년)

* FPC 제외

2. 농사용전력 제외 수산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시 절감효과

■ 농사용전력 미적용 수산시설에 대한 산업용요금 적용 시 전기요금 : 53.6억원

-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용(일반용)으로 분류된 주요 수산시설의 전기요금 인상분 17%를 적용하면 53.6억원 수준임

※ '21년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시설의 전기 요금은 45.9억원임(인상 전 기준 전기요금)

【산업용 및 농사용 적용 시 전기요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부전기요금('20년 기준)			
	기준 전기요금 (산업용)	산업용 인상요금 적용시(A)**	농사용 인상요금 적용시(B)***	산업용-농사용 차이(B-A)
계	4,585	5,364	3,406	1,958
위판장 (생존유지시설포함)	3,360	3,931	2,496	1,435
저온보관시설	241	282	179	103
제빙·냉동시설	848	992	630	362
양식장폐사어처리시설	136	159	101	58

자료 : 회원조합 설문조사 자료 기준('21년) * FPC 제외

** 주) 22.1월 대비 22.10월 산업용(갑) 전기료 인상분(17%) 적용 후 전기요금

*** '22년 10월 전기요금 인상 후 농사용(을)요금(46.5원)은 산업용(갑) I 요금(73.2원)의 63.5% 수준의 결과임

■ 농사용전력요금 적용 시 발생가능한 절감 효과 : 19.6억원

- 농사용전기 미적용 수산시설에 대해 농사용전력요금 적용 시 사용 전기요금은 34.1억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시 대비 19.6억원의 차이를 보임

■ 절감 금액은 현재 납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36.5% 수준임

-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시 어업인 입장에서는 현재 납부 전기요금의 36.5%를 절감할 수 있음

부록 : 전기요금 인상 및 이에 따른 문제점

한전 적자 누적에 따른 전기료 일괄 인상

- 유가상승 및 재생에너지 전환 등으로 전기가격의 상승에 따라 한국전력의 경영 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전기료 인상
- 업종별 전기 사용용도에 따른 구분없이 22.1월 대비 22.10월에 일괄적으로 kwh당 12.3원을 인상함
- 농사용(을)의 경우 22.1월 기본요금이 kwh당 35.7원에서 48.0원으로 34% 증가
- 산업용(갑) I 은 17% 인상, 산업용(갑)II는 16% 인상 효과를 가져옴

【수산업·어촌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

구분	전력량 요금(원/kwh)		인상액(인상률)
	'22.1.	'22.10.	1월 대비 10월
농사용(갑)	16.6	28.9	12.3(74%)
농사용(을)	35.7	48.0	12.3(34%)
산업용(갑) I	72.3	84.7	12.3(17%)
산업용(갑) II	74.1	86.4	12.3(16%)
일반용전력(갑) I	87.5	99.8	12.3(14%)

출처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자료 : 정책토론회 자료(22.11.30)

인상율로 보면 산업용 대비 농사용(을)의 인상율이 더 높음

- 농사용 전력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농어민 지원을 위해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수산양식업을 포함한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실상 차별 조치임
- 특히 대표적인 농사용 전기요금 농사용(을)은 34%로 높으며, 인상률이 낮은 산업용(갑)II 16% 인상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공공요금은 같은 금액이 아닌 비율로 인상하는데 반해 올해 전기요금은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이 인상되어 수산업 특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필요로 하는 수산업계에 심각한 부담과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전기요금 미납자 확대로 수산분야 어려움 봉착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개별 업체 경영상의 어려움이 직면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21년 대비 22년 전기요금의 미납한 경우가 크게 늘어남
- '21년 1~9월 대비 22년 미납요금이 15배 이상 증가함

【전기요금 미납금액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월	청구요금	수납요금	미납요금
'21년	1	1,219,934	1,219,911	23
	2	1,206,367	1,205,558	809
	3	1,149,021	1,148,664	357
	4	1,240,081	1,240,081	-
	5	1,147,520	1,147,296	225
	6	1,139,986	1,139,986	-
	7	1,181,427	1,181,420	7
	8	1,263,142	1,262,338	804
	9	1,235,972	1,235,372	600
	합계	10,783,451	10,780,625	2,825
'22년	1	1,369,144	1,368,892	252
	2	1,387,603	1,387,469	135
	3	1,314,144	1,313,821	323
	4	1,471,603	1,470,028	1,575
	5	1,441,092	1,439,931	1,160
	6	1,438,365	1,437,834	531
	7	1,581,387	1,573,705	7,683
	8	1,633,927	1,622,559	11,368
	9	1,408,617	1,383,992	24,624
	합계	13,045,883	12,998,231	47,652

※ 자료 : 정책토론회 자료('22.11.30)

■ 농사용전력 미적용 수산시설 측면에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더 큰 부담

- 그동안 농사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없었던 일부 주요 수산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는 '22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더 큰 부담을 갖게 됨
- 수산업의 경우 농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전기가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옴
- 동일한 생산과정임에도 시설의 규모 소유 운영주체에 따라 농사용 전기가 달리 적용
- 한전 전기공급약관 개정 등을 통해 농사용전기 적용분야 확대 및 농어업간 지원기준 형평성 확보 필요

【참고문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2.12월

수협중앙회, 농사용전력 확대 적용 관련 국회 건의 자료

수협중앙회, 수산시설 전기요금 사용 현황 자료(2021)

정책토론회(22.11.30),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농사용전력요금 인상 대응방안”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터넷자료(22.11)

2023년 경제 및 금융 현안

강인순 책임연구원
(insoonkang@suhyup.co.kr)

목 차

요 약	28
I. 서 론	31
II. 대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32
III. 주요 현안 및 파급경로	39
IV.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52

요 약

대내외 경제 및 금융 동향

○ 세계 경제 동향

-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침체 기간의 과도한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금리 인상을 통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음
- 지정학적 리스크와 각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조치도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을 견인
-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경기침체기 진입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2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연초 전망했던 3.8%에서 2.7%로 하향조정 하였음

○ 국내경제 동향

-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의 증가는 국내경제에 영향 미치고 있음
-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상환부담으로 민간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실물경제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대내외 여건 악화로 4월 2.4% 수준으로 전망되었던 '23년 경제성장률은 11월 1.7%로 하향조정 되었음

○ 금융시장 동향

- 유동성 축소와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22년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추세임
- 금리인상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채권시장에 대한 불안심리로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 주택시장의 불황과 더불어 가계부채의 부실가능성이 점증

주요 현안 및 파급경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 전쟁의 지속은 공급망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들이 예비적 상황에

대하여 주요 재화에 대한 비축을 하게 되므로, 물가 상승의 가속화 원인이 될 수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러 교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등 유럽지역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함
- 유럽지역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심화는 유럽 금융시장의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가속화

-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유동성 및 금리 변화는 주변국의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침
-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주변국들은 1) 미국에 대하여 금리 역전을 허용하거나, 2) 경기둔화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금융안정을 위하여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맞추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함
- 미국과 시장금리의 역전이 발생하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상대적 투자유인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금리인상기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될 경우,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 둔화의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가계부채 부실

- 가계부채 부실은 가계의 소득감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무 부담 증가, 자산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부채상환능력 하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
- 가계부채의 부실은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가계의 채무불이행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며,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은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은 전이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기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택가격 하락 가속화

- 주택가격의 변동은 지역 간 전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가계의 소비가 감소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 대출의 수요를 하락시킬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하락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 신용리스크 확대

-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는 신용에 대한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부동산관련 대출의 부실은 수익성 악화와 동시에 손실금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권수익률 상승은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킴
- 금융시장 유동성 축소로 인한 주가하락, 금리인상 및 리스크프리미엄 증가로 인한 채권가격 하락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실로 연결

○ 잠재적 신용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비 필요

- 금리인상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및 모니터링 필요
-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한 흡수력 제고 필요

○ 고위험 차주에 대한 신용축소 필요

- 대출기준 강화 및 리스크관리를 통한 경영안전성 확보가 요구됨

I 서론

■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었으며, 그 결과 전 세계는 '96년 이후 들어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음
-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세계 각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성장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태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중국-대만 관계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는 국제경제 및 사회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 위와 같은 대내외 여건의 악화는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시장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본 보고서에서는 '23년의 경제 및 금융 현안과 발생할 수 있는 파급경로에 대하여 살펴봄
- 또한 이러한 현안들이 우리나라 금융 및 수협금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시함

Ⅱ 대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1. 세계 경제 동향

▶ 고물가와 고금리 국면으로의 전환

-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침체 기간의 과도한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 '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전년대비 8.8%¹⁾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미국의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물가상승률²⁾은 '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5.9%로 나타났음
 - '23년 10~11월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은 1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함

【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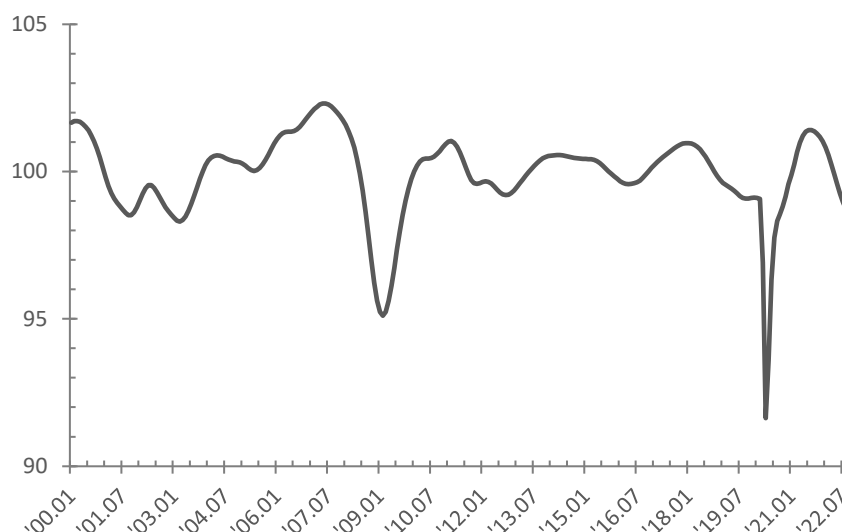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2.10)

2) PCE 물가의 전년동기비 증감률

- 대다수의 국가들은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하여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있음
 - 미국 연준(Federal Reserve)은 '22년 한 해 연준 목표금리(Federal Funds Target Rate)를 0.00~0.25%에서 4.25~4.50%로 4.25%p 인상하였음
- 그러나, 지정학적인 문제와 각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봉쇄조치로 인하여 글로벌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심화 기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물가상승은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효과를 제약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요인으로 작용
 -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식료품, 원자재 공급충격으로, 전반적인 재화 및 서비스 가격상승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중국 내 경제활동을 억제시켜 주변국 교역량 하락과 생산부진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급격한 금리 인상과 전반적인 경제활동 둔화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금리인상은 소비와 투자의 저해요인³⁾으로 시장의 기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 OECD의 전세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⁴⁾는 '21년 7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경기침체국면(Recession)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남

【 OECD 세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3) 금리인상은 대출 비용을 상승시켜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킴

4) 경기순환변동치가 100이상이며 상승추세인 경우 호황, 하락추세인 경우 둔화, 100미만이며 하락추세인 경우 침체, 상승추세인 경우 회복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충격요인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성장을 전망 하향 조정

- IMF는 연초 '2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하였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하여 전망치를 2.7%로 하향조정하였음
- IMF의 1월 경제전망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코로나19 확산, 중국부동산 이슈 등에도 불구하고 '22년 경제성장률을 4.4%로 전망하였으며 '23년 경우도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3.8%로 전망함
- 그러나 '22년 10월 경제전망 자료에서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신흥국 부채문제, 유럽지역 에너지공급문제 등을 이유로 '23년 세계경제전망을 2.7%까지 하향조정하였음
- 7월 경제전망보다 10월 경제전망에서 '22년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이유는 현재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리스크 수준이 보다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임

【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

(단위 : %)

전망 발표시점	'22년 1월	'22년 4월	'22년 7월	'22년 10월
'22년 경제성장률	4.4	3.6	3.2	3.2
'23년 경제성장률	3.8	3.6	2.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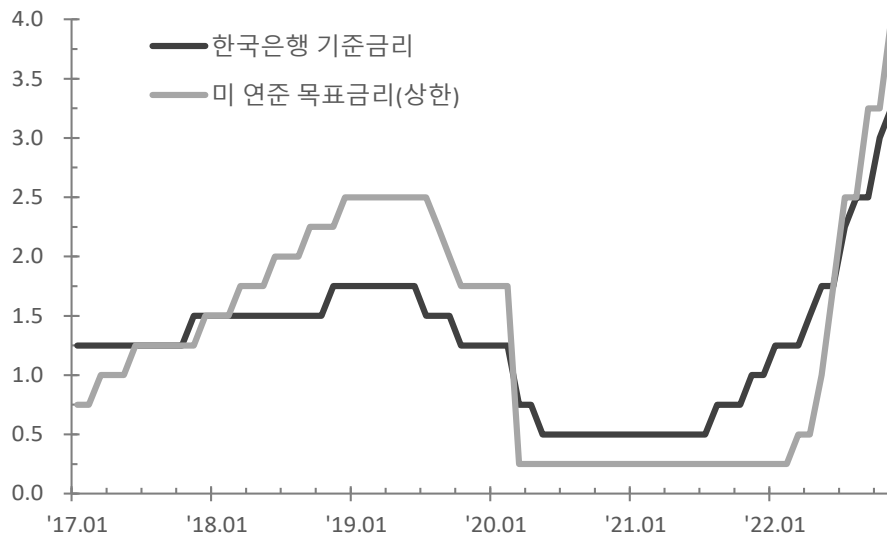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 국내경제 동향

■ 불확실성 증대와 통화정책 긴축으로 인한 경기회복속도 둔화

-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의 증가는 국내경제에 영향 미치고 있음
 -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음
 - 미국 연준은 긴축적인⁵⁾ 통화정책을 지속하였으며, 한국은행의 경우도 '22년 초 1.25%였던 기준금리를 6차례 인상을 통해 3.25%까지 인상하였음
 -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하여 시장의 유동성은 축소되었고,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음
 - 금리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경기회복속도를 둔화시킴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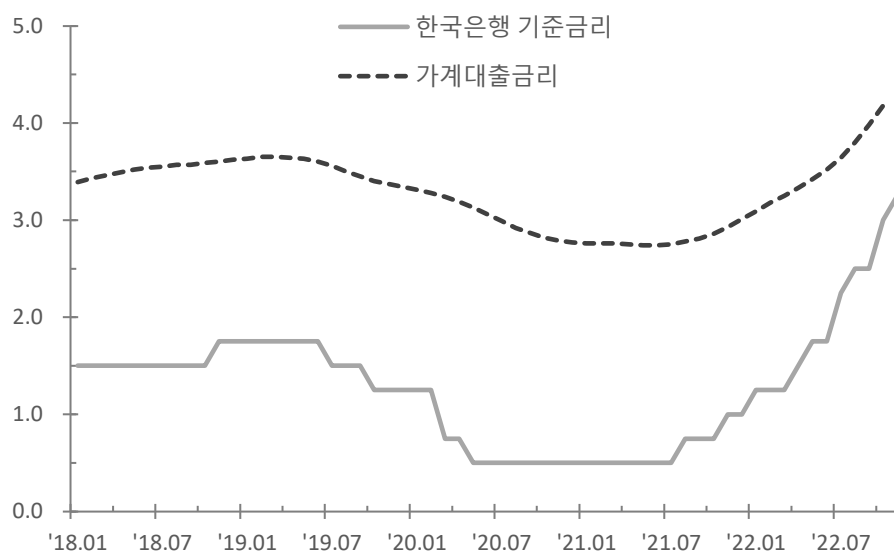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5) 금리인상과 더불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을 긴축적 통화정책이라고 함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증가 및 내수 악화

-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음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2년 1월 3.09%에서 '22년 10월 현재 4.18%로 약 1.09%p 인상되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700조 수준으로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은 가계소비지출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실물경제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미국의 연준 목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은 상태임
 -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플레이션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미국 연준은 12월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3.75~4.00% → 4.25~4.50%)을 단행하였음
 - 그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미국 연준 목표금리의 정책금리 격차가 1%p 이상 벌어지게 되었고, 이에 '23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대내외 요인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이하의 경제성장

-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하여 4월 2.4% 수준으로 전망되었던 '23년 경제성장률은 11월 1.7%로 하향조정 되었음⁶⁾
- 당초 경제전망에서는 '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유럽의 성장률 하락, 인플레이션 정상화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하향조정 되었음
- '23년의 경제전망치인 1.7%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⁷⁾을 하회하는 값임

3. 금융시장 동향

▶ 시장의 기대 악화와 증권시장 둔화

-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한 유동성 축소,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22년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추세임
- '21년 6월 25일 3,302.8로 마감한 KOSPI는 '21년 12월 28일 이후로 종가기준 단 한번도 3,000이상을 기록하지 못하였음
- 주식시장에서의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인하여 시장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음
- 연초 KOSPI 시가총액 중 33%를 상회하던 외국인 보유 주식은 31%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감소

▶ 금리인상으로 인한 채권시장 악화

- 금리인상과 더불어 경기수축국면으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회사채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됨

6) 한국은행 경제전망('22.11)

7)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로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2.0%내외

- 금리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는 채권가격을 하락⁸⁾
- 비우량기업에 대한 리스크프리미엄 상승으로 회사채 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함
- 추가적으로 레고랜드 사태는 채권시장의 불안심리를 가중하였음
 - 레고랜드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강화
 - 채권시장에 대한 불안감 형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채권수익률은 일제히 상승하였음
 - 이후, 4.5%를 상회하던 국고채 3년 수익률은 3.5~3.7%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회사채의 비선호현상이 유지되며 신용스프레드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주택시장 불황과 가계부채 부실가능성 점증

-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2년 8월부터 하락세로 접어들
 - '22년 10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기대비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임
-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따른 주택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가능성에 대한 우려 점증

8) 채권은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져있으므로, 채권수익률이 상승은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것을 의미

Ⅲ 주요 현안 및 파급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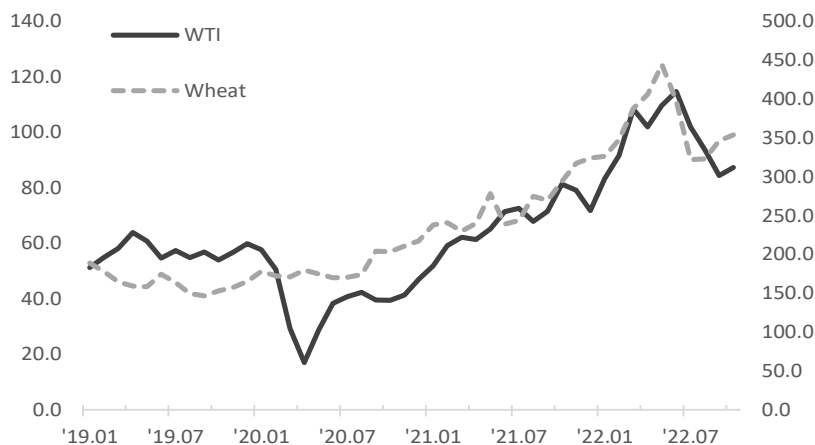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1) 배경 및 현황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침범하며 전쟁이 시작되었음('22년 2월 24일)
-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국들의 러시아 제재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음
-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가격, 식료품가격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이는 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는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21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임
 - 전쟁 직후 국제유가와 소맥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한 후 현재 다소 하락하였으나,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가격 변동 우려가 잔존하는 상태임
- 전쟁의 장기화는 국제사회 및 국제경제의 불안요인임

【 국제유가 및 소맥 가격 추이 】

(단위 : %)



자료 :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경로

■ 인플레이션 심화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주요재화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재화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이는 과거 중동 전쟁과 유사한 형태
- 또한, 전쟁의 지속은 공급망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국가들이 예비적 목적에서 주요 재화를 비축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 물가상승의 가속화 원인이 될 수 있음
 -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이 재개되었지만,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로 세계 각국은 주요 재화에 대한 비축을 실시하고 있음
 - 외국에 대한 식량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경우 식량안보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음
-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은 다른 재화의 가격 형성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전반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유럽경제에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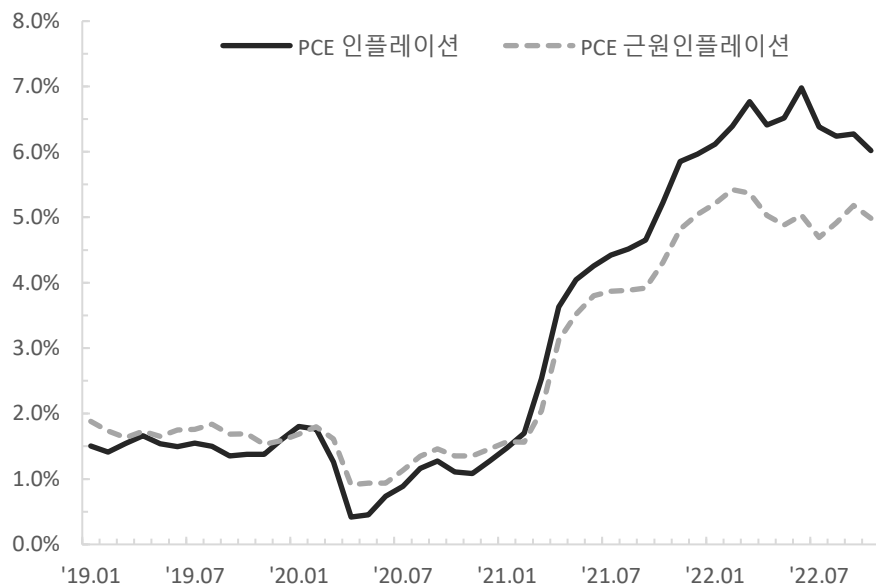
- 유럽지역의 에너지와 식료품 소비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구조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러 교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 시키는 등 유럽지역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함
- 유럽지역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심화는 유럽 금융시장의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유로존의 경우,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이지만 금융시장의 규모는 미국의 10배 수준임
 - 이는 유로존의 경기침체 및 유동성 축소는 전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영향은 신흥국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됨

2.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가속화

1) 배경 및 현황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확대된 유동성은 전세계적인 물가상승을 견인하였음
- 미국의 개인소비에 대한 물가상승률⁹⁾은 '22년 동안 월평균 5.9%로 나타났으며, 개인소비에 대한 근원물가상승률(core inflation rate)¹⁰⁾은 평균 4.7% 수준을 나타내었음
- 미국의 물가상승률 수준은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이 2.0%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미국 인플레이션 추이 】



자료 :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9)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PCE) 물가의 전년동기비 증감률

10)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

- 미국 연준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를 통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음
 - 미국은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7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그 결과 연준 목표금리는 0.00~0.25%에서 4.25~4.50%로 4.25%p 인상되었음
 -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부터 대차대조표 축소¹¹⁾까지 약 4년이 걸렸던 과거 사례와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실시함
-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하여 신흥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중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흡수되었음

【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비교 】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확대
테이퍼링 ¹²⁾	- 테이퍼링 실시('13년 12월~) - 테이퍼링 지속(~'14년 10월)	- 테이퍼링 실시('21년 11월~) - 테이퍼링 지속(~'22년 03월)
금리인상	- 금리인상 실시('15년 12월) - 3년간 0.25%p 인상 8회 (0~0.25% → 2.00~2.25%)	- 금리인상 실시('22년 3월) - 8개월간 0.25%p 인상 1회, 0.50%p 인상 2회, 0.75%p 인상 4회 (0.00~0.25% → 4.25~4.50%)
대차대조표 축소	- 대차대조표 축소 시작('17년 10월~) 월 100억~500억 달러 규모 -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19년 9월) - 금리 인상 재개('19년 12월)	- 대차대조표 축소 시작('22년 6월~) 월 감축 상한액 475억~950억 달러

주 : '22년 12월 기준

11)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여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

12) 채권 등의 자산을 매입하여 시중에 통화를 유통하는 정책에서 자산 매입을 축소시키는 경우

2)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의 파급경로

■ 금리 인상의 원인

- 통화정책(금리인상/인하 등)은 물가안정, 금융안정, 경기부양 등과 같은 중앙은행의 기능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
 -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의 목표로 “최대고용, 안정된 물가, 적절한 수준의 장기 금리”를 제시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준의 통화정책으로 인하여 미국의 실업률은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연준은 계속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고수하였음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단념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 지표가 과대 평가되었다는 연준의 평가에 의한 것임
- 그러나, 인플레이션 확대 수준이 예상수준을 상회하자, 통화정책의 기초를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
 -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통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며, 미국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은 2.0%임

* 참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

- (한국은행법 1조 1항)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한국은행법 1조 2항)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변국 금리인상

-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유동성 및 금리 변화는 주변국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침
 - 미국 연준의 목표금리가 인상될 경우, 주변국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하여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되는 금리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주변국들은 1) 미국에 대하여 금리 역전을 허용하거나, 2) 경기둔화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금융안정을 위하여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맞추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함
 - 미국 연준의 목표금리에 맞추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주변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나,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는 등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주요국 정책금리 비교 】

(단위 : %)

	미국	한국	유로	영국	호주	캐나다
'22년 2월	0.25	1.25	0.00	0.50	0.10	0.25
3월	0.50	1.25	0.00	0.75	0.10	0.50
4월	0.50	1.50	0.00	0.75	0.10	1.00
5월	1.00	1.75	0.00	1.00	0.35	1.00
6월	1.75	1.75	0.00	1.25	0.85	1.50
7월	2.50	2.25	0.50	1.25	1.35	2.50
8월	2.50	2.50	0.50	1.75	1.85	2.50
9월	3.25	2.50	1.25	2.25	2.35	3.25
10월	3.25	3.00	1.25	2.25	2.60	3.75
11월	4.00	3.25	2.00	3.00	2.85	3.7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준목표금리의 상한값임

■ 한미 금리 역전현상

- 미국에 금리역전을 허용할 경우, 시장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미국의 정책금리가 더 높더라도, 시장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므로 우리나라의 시장금리가 더 높을 수 있음
- 시장금리의 역전이 발생하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상대적 투자유인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이 유출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주변국 시장금리에 비하여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수익률의 상대적 우위로 인하여 달러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환율이 증가하는 현상 발생
- 과거('18년 2분기~'20년 1분기)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가 역전되었던 적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견고한 국내 금융시장 여건으로 인하여 우려했던 수준의 금융시장 충격은 나타나지 않았음
 - 이는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여건이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견고했기 때문으로, 시장금리가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예상되는 기대수익이 미국시장에 비해 낮지 않아 자본유출이 일어나지 않은 것임
-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에 비해 견고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시장금리까지 역전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인한 경기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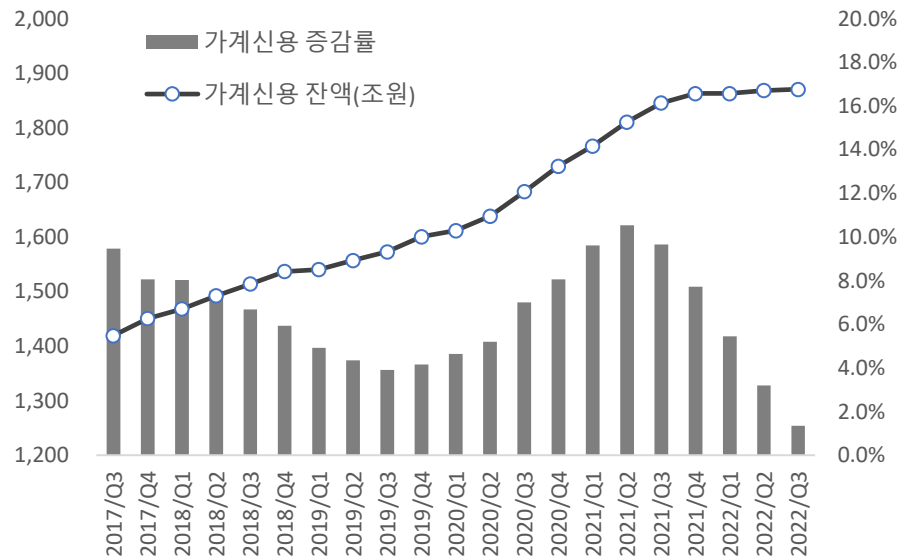
- 미국의 금리인상기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될 경우,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 둔화의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금리인상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비용 상승을 의미함
 - 가계의 금리 부담은 가계 소비여력을 감소시키며 내수의 위축으로 이어짐
 - 기업은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투자의 위축으로 나타남
-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전반을 상승시키는데, 이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3. 가계부채 부실가능성

1) 배경 및 현황

-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이 팽창하였음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년 말 843.2조원에서 '22년 3분기 말 1,871조원으로 121.8% 증가하였음
 - 특히 기준금리가 2.0% 아래로 진입하였던 '15년 2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전인 '21년 2분기까지 1,098조원에서 1,811조원으로 약 65%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OECD 주요국가 중 4위를 차지
-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며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급격하게 팽창하였던 가계신용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로 '1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12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현재와 동일하게 3.25%였으나,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는 '12년 6월 당시 약 3.7%였던 것에 반해 현재는 3.98% 수준
 -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는 과거보다 규모가 훨씬 큰 상황이며, 이에 대한 이자부담도 높은 상황으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가계신용 및 증감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2년 3분기 현재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둔화하였으나, 신용위험은 매우 높은 상태임
 - '22년 3분기 가계신용 상승률(전년동기비)은 1.4%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그러나 '21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161.3%¹³⁾에 달하며, GDP의 89.9%에 달하는 수준임
 - 대출행태서베이¹⁴⁾에 의하면 '22년 4분기 현재 가계에 대한 신용위험은 카드대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와 유사한 수준임

【 주요 위기사점의 가계신용위험 】

시점	'03년 2분기 (카드대란)	'08년 4분기 (금융위기)	'20년 2분기 (코로나19)	'22년 4분기 (현재)
가계신용위험	44	25	40	4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3) 한국은행 가계신용통계 기준

14)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총괄담당자 대상 대출태도, 신용위험, 대출수요 등에 대한 동향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로 수치가 높을수록 응답자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함

2) 가계부채 부실의 파급경로

가계부채 부실의 원인

- 가계부채 부실의 원인은 경기악화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자산가격 급락으로 인한 자산효과 등이 있음
- 특히,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 상승은 가계부채의 가장 위험한 요인임
 - '2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은행 대출 중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7.9%로 금리인상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
 - 금리인상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의 이자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보임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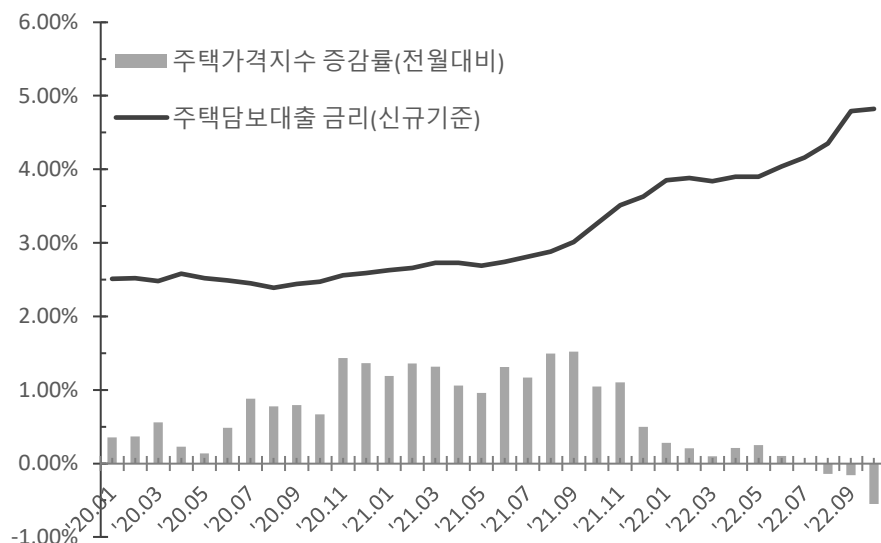
- 가계부채의 부실은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타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가계의 채무불이행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며,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은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은 전이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기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금융시스템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게 되며 이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됨

4. 주택가격 하락 가속화

1) 배경 및 현황

- 저금리와 유동성과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 저금리로 인한 신용팽창으로 인하여 주택매매가격지수¹⁵⁾는 '20년 5월부터 '22년 7월까지 23.9% 상승
 - 주택매매가격 상승에 힘입어 동기간 전세가격지수는 17.2% 상승
-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침
 -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종료하고 '21년 8월 금리 인상을 단행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는 '20년 5월 2.39%까지 하락하였으나, 기준금리 인상 이후 3%를 넘어섰으며, '22년 10월 현재 4.82%까지 상승하였음
-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수요는 감소하였으며,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잔액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음

【 주택가격 및 은행대출금리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5) 주택매매가격지수(KB)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인하여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 '19년 8월부터 '22년 6월까지 35개월 연속 상승하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는 '22년 8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였음

2) 주택가격 하락의 파급경로

▶ 주택가격 하락요인

- 주택가격의 하락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하여 발생함
 - 주택시장에 있어 수요-공급 불균형은 수요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
 -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자산보유에 대한 비용 증가를 의미하며, 주택수요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택가격의 변동은 지역 간 전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주택시장이 경기변동이나 금융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러한 환경 변화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또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교통의 발전 및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가격 동조화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남

▶ 가계소비 위축

- 주택가격의 하락은 가계의 소비 감소 원인이 될 수 있음
 - 이는 가계의 자산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가 변화하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의한 것임
- 주택가격의 하락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수요 감소요인으로 금융기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택가격의 하락추세가 지속될 경우, 부동산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됨

■ 금융기관 담보가치 하락

- 주택가격의 하락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를 하락시켜 부동산 관련 대출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의 존재로 인한 원금의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발생시킴
 - 그러나, 주택가격의 급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부실이 발생하였을 때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위험이 발생하게 됨
 - 또한, 추가적인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차주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세가격 하락 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IV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1.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신용리스크 확대

-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는 신용에 대한 건전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함
 - 전반적인 경기둔화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익을 악화시키며, 이는 신용리스크를 확대시켜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자산을 부실화 할 수 있음
 - 금리인상은 가계 이자부담 증대와 가계 소비둔화 및 자산가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함
 -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자수익 감소와 더불어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수협 상호금융은 대출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대출로, 편중이 극심한 자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택가격에 의해 노출된 리스크의 수준이 높음

▶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

- 기준금리 인상은 채권수익률을 상승시키며, 이는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를 의미함
 - 채권금리와 예금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있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함
 - 상호금융업의 경우 경기둔화 및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예금수요자의 위험기피성향 확대로 예금유치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금융시장 유동성 축소로 인한 추가하락, 금리인상 및 리스크프리미엄 증가로 인한 채권가격 하락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실로 연결됨

■ 보험자산 수요 및 보험이익 감소

-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는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됨
 -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의 보험상품은 수익성 보장 및 예상 정도가 수요에 영향을 미침
 - 금융시장 불황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전반적인 기대수익률 하락은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의 투자상품 수요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단, 저축성보험의 경우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기대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 증가할 수 있음
-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는 보험이익을 하락시킴
 - 물가가 상승할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게 됨
 - 수협공제의 경우 화재, 상해, 재해 공제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이익이 감소할 수 있음

2. 대응방안

■ 잠재적 신용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비 필요

- 금리인상기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잠재적이고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
 - 장기간의 저금리기조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으로 인하여 현재의 리스크 수준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지표는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담보가치와 차주의 상환능력이 과대평가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발생 가능성 있는 손실에 대한 흡수력 제고 필요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한 지원기간이 연장되었으나, 현재 대내외여건상 부실과 연체로 전환되는 차주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들의 부실은 연쇄부실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수준보다 보수적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고위험 차주에 대한 신용축소 필요

- 자금조달 비용상승과 더불어 은행업의 예금유치 경쟁 지속으로 인하여 상호 금융의 자금조달 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기관들의 예금유치 경쟁으로 인하여 제2금융권의 유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며, 신용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리스크관리를 통한 경영 안전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문헌자료

- 강유덕(2012),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상장협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66호, pp.48-75.
- 곽준희(2022), “외국인 투자자와 국채시장의 금융안정 기능”, 「주간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31권 25호, pp.13-15.
- 김영도(2022), “최근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위험요인 점검”, 「주간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31권 24호, pp.3-9.
- 김재철, 강현주, 백인석(2017),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II): 한미 금리 동조화 및 역전 지속여부 진단”, 「이슈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17-03, pp.1-17.
- 노건엽, 이승주(2021), “금리 상승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KIRI 리포트 포커스」, 보험연구원, 2021.6.7., pp.1-6.
- 이승호, 김한수(2021), “글로벌 미달러화 자금조달시장의 변화 및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21-02, pp.1-58.
- 장민(2022),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31권 6호, pp.1-9.
-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경제전망보고서(2022년 2월)”, 한국은행
-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경제전망보고서(2022년 11월)”, 한국은행
- IMF Economic Outlook(2022), “World Economic Outlook: Countering the Cost-of-Living Crisis”, IMF, October 2022, pp.1-166.

인터넷사이트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Federal Reserve 홈페이지(<https://www.federalreserve.gov>)
-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https://fred.stlouisfed.org>)
- IMF 홈페이지(<https://www.imf.org>)

수산경제연구원 이슈포커스 2022-04호

발행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발행인	회장 임준택
편집인	수산경제연구원장 엄기두
수산경제연구원 연락처	전화 (02) 2240-0422 팩스 (02) 2240-0420 홈페이지 http://fei.suhyup.co.kr
인쇄처	피알앤북스 (02) 467-4545
발행일	2022. 12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